

세상을 바꾼 5년



국민청원 5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국민청원’

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통창구가 되었습니다

2017.8.19.~22.2.28



누적 청원 게시글

111만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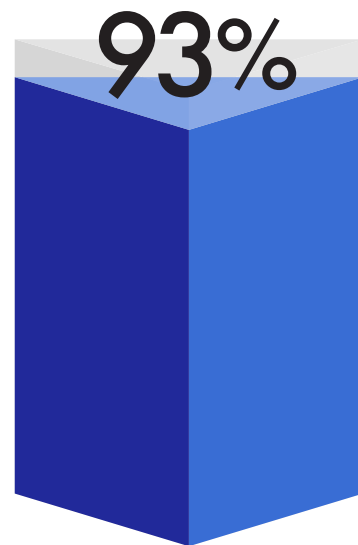
청원게시판 방문

5억1,600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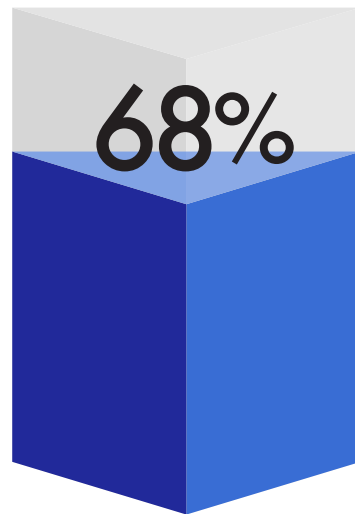


동의참여 국민

2억3,000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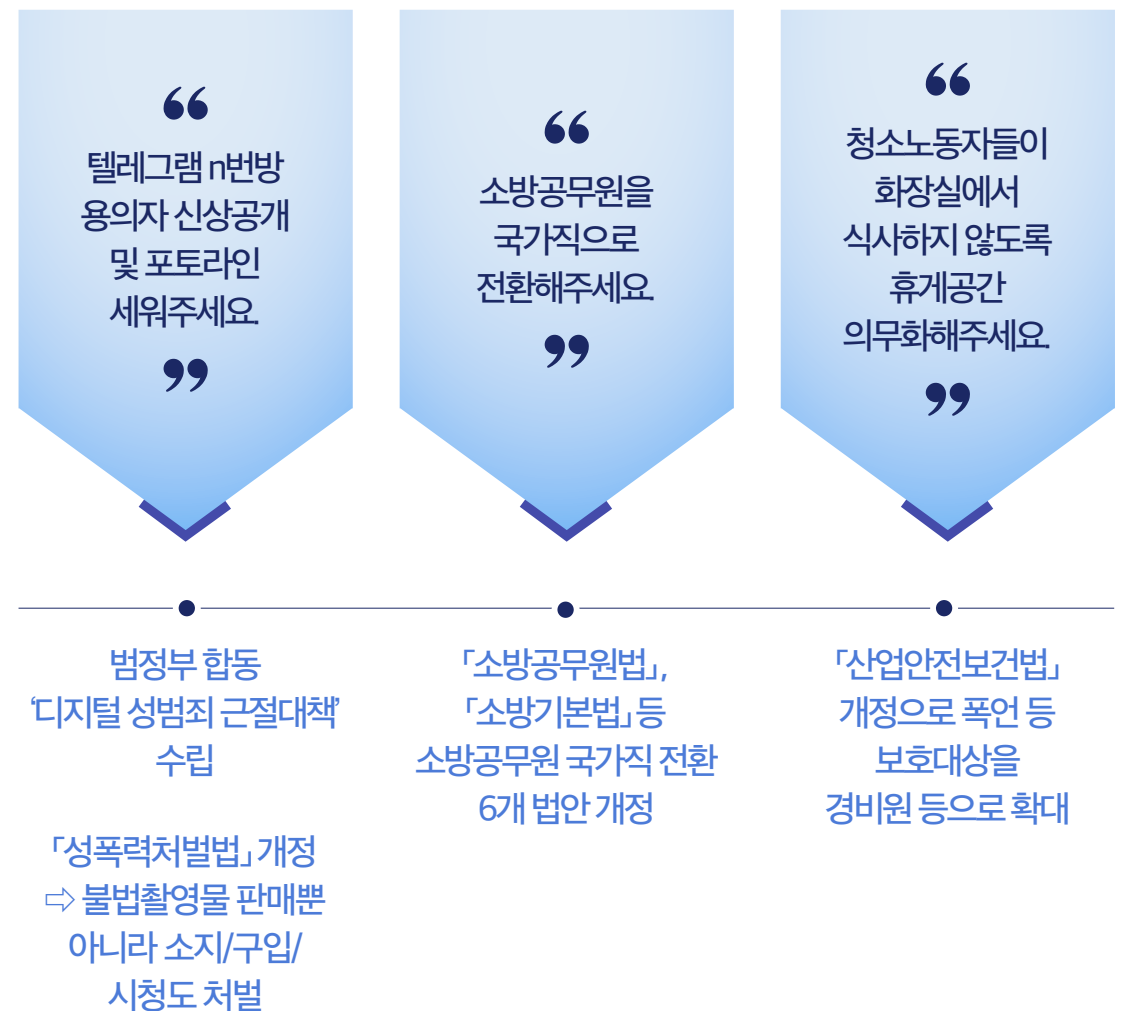
'국민청원을 알고 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보았다'

국민청원을 통해 나타난 목소리는 법 개정의 동력이 되고, 제도 개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지난 5년, 세상을 바꾼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개인의 문제제기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그 목소리에 공감의 쌓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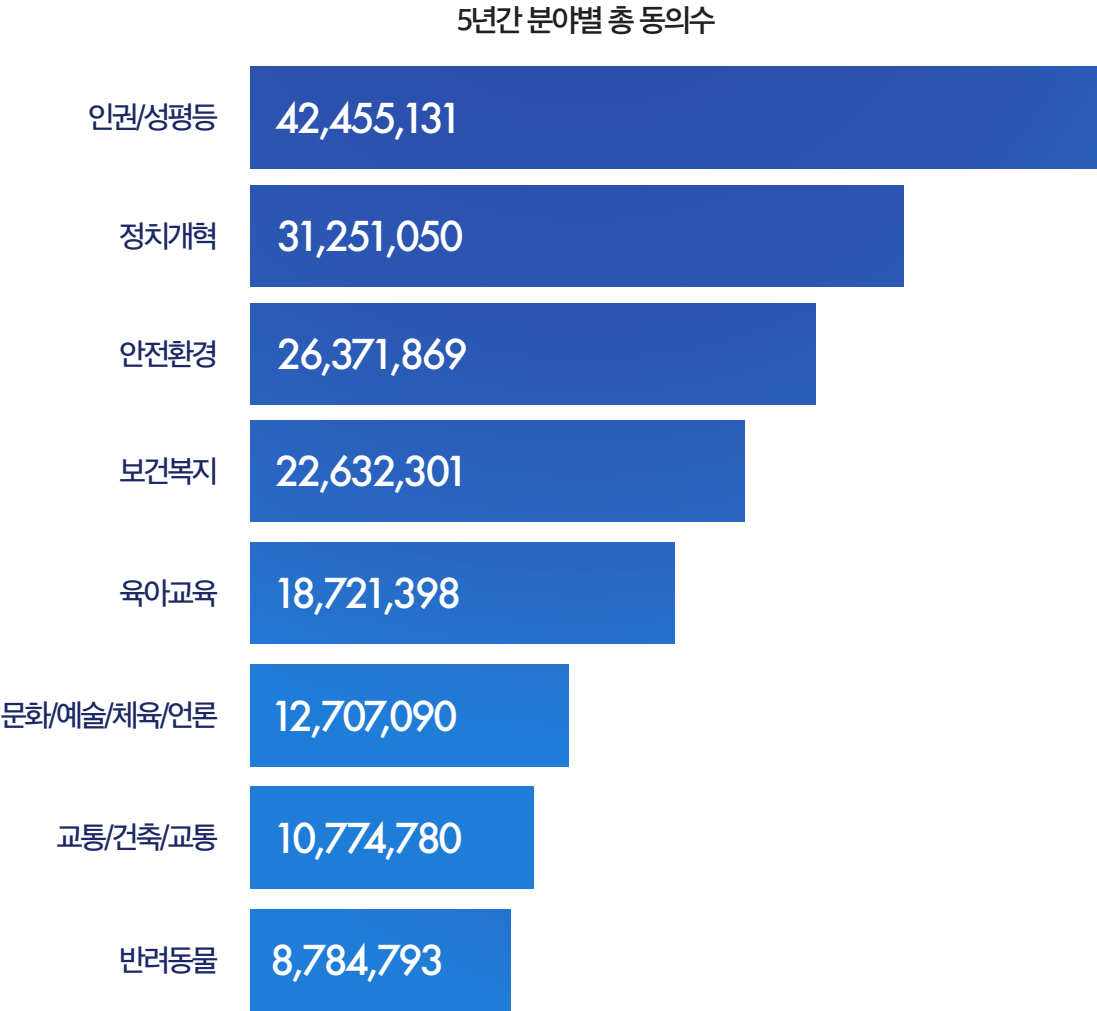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동물학대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처벌해주세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음주운전·심신미약 범죄·성범죄에 대한 약한 처벌 강화
어린이 안전권·동물권 강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것들이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20년 8월 19일, 국민청원 3년 메시지



직접민주주의 기반 확대, 합리적 공론형성 기여 등 긍정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국민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취득(58%)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입장을 결정(66%)하며,
기존의 생각을 변경(44%)하기도 했습니다.

※ 한국리서치, 2022.04.01.~04.04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음을 증명한 것, 국민청원의 성과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의 권한 밖이거나 정치적인 내용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한 청원도 물론 있지만,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21년 8월 19일, 국민청원 4년 특별답변



‘국민청원’은 이렇게 운영됐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민청원을 만든 건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였습니다

하루 평균
청원참여 통계
(17.8~22.2)

청원 수



670 건 (누적 110만 8,471건)

방문자



31 만명 (누적 5억 1,569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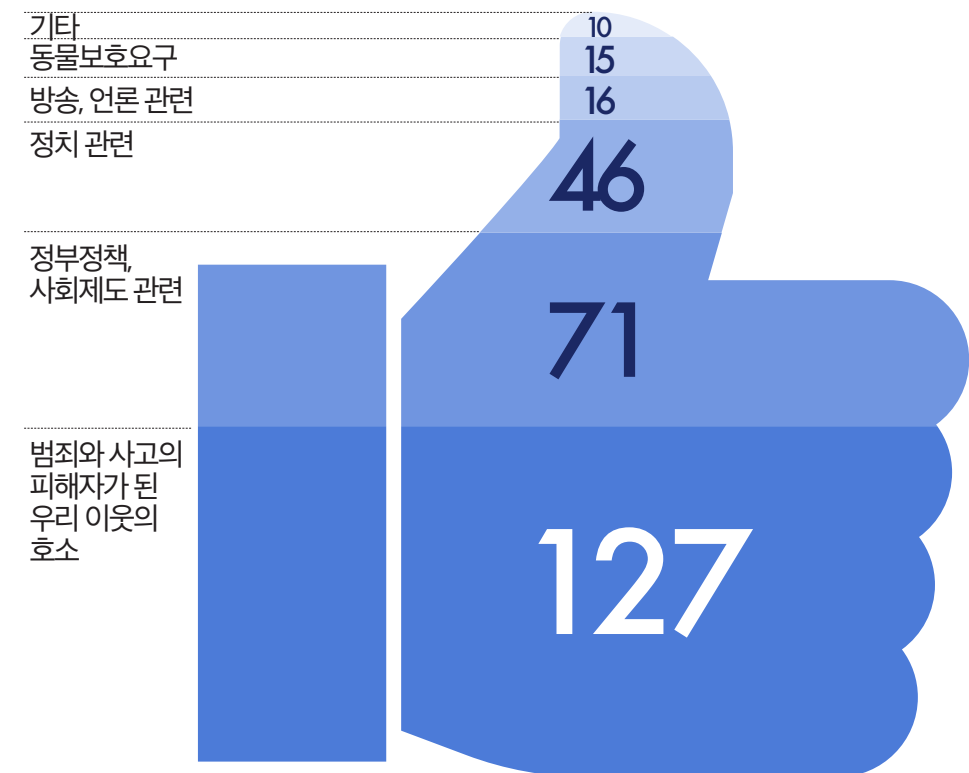
청원 동의



14 만명 (누적 2억 2,856만 명)

20만 동의를 넘긴 국민청원은 285건에 달했습니다

(22.4.18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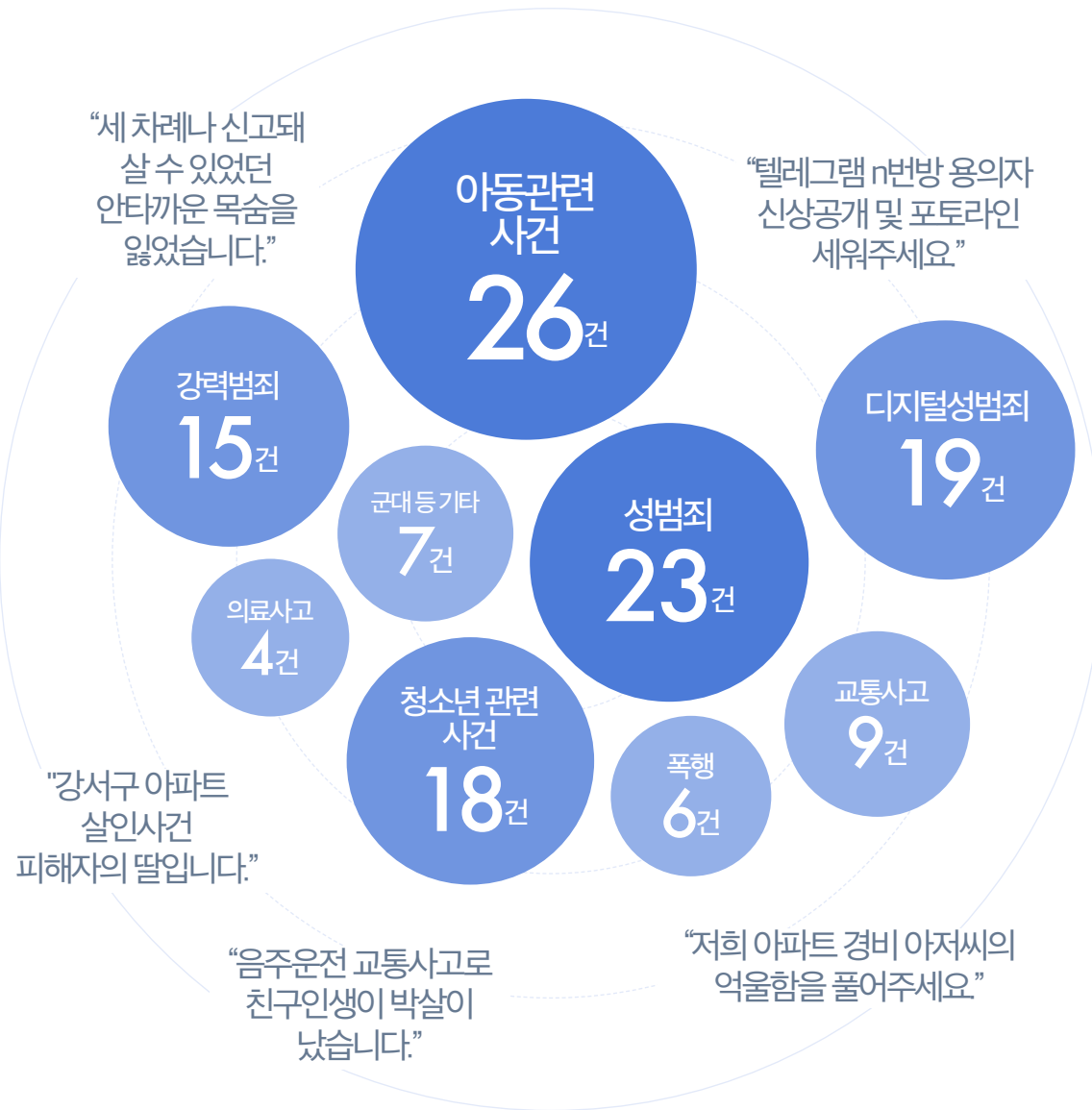


범죄와 사고의 피해자가 된
우리 이웃의 호소가 가장 많았습니다.

20만 동의를 넘긴 청원

127건

이웃 호소에 대한 공감,
안전사회를 바라는 목소리



20만 동의를 넘긴 청원

71건

정책마련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단일 이슈로 최다 청원 동의

‘텔레그램 N번방 이슈’

20만 이상 청원 9건, 총 동의수 769만 명

“N번방 대화 참여자들도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해주시요

“텔레그램 아동, 청소년
성노예 사건 철저한 수사 및
처벌 촉구합니다.

“‘n번방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참여인원 : [2,715,626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마감 2020-04-17

청원시작 2020-03-18
청원인 naver - ***

284건

정부답변
(17.8~22.3)

문재인 대통령 직접 답변,
20만 동의 미만 청원 일부 답변 등을 포함하여
총 284건의 정부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21년 8월 19일, 국민청원 4년 특별답변)

국민청원은 이렇게 세상을 바꿨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 ✓ 아동권리보장원 출범(2019.7) 및 아동관리 통합서비스 실시
- ✓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배치 근거 마련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020.4) 및
전담 공무원 증가(‘20년 290명 → ‘21년 730명)
- ✓ 학대아동 즉각분리 제도 시행(‘21.3)
- ✓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16년 53개소 → ‘21년 105개소)
- ✓ 아동학대 행위자 자격정지 기간 강화(2년 → 5년)



위탁모에게 맞아죽은 15개월 딸 얘기 좀 들어주세요* 등
아동학대 관련 20만 이상 청원 10건

*2018년 12월, 위탁모에게 맞아 숨진 아동의 친부가 작성한 청원, 22만명 국민이
동의함

세차레나 신고되 살릴 수 있었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등 단일 사건 20만 동의
이상 청원 5건, 총 131만 국민 동의

*2020년 10월, 16개월 입양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가해자 처벌과 아동학대방지 대책 요구한 청원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대상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명 N번방 방지법)

- ✓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20.4)
- ✓ 「성폭력처벌법」개정(20.4)
⇒ 불법촬영물 판매뿐 아니라 소지/구입/시청도 처벌
- ✓ 「형법」개정(20.4)
⇒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기준 상향(만13세→만16세)
- ✓ 「범죄수익은닉규제법」개정(20.4)
⇒ 경찰의 기소전 추정보전 제도 도입
- ✓ 「아동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개정(20.5)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법정형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촬영물 유통금지·삭제 의무 부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2020년 3월)* 등 20만 이상 청원 9건

*일명 'N번방',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유포한
디지털성범죄 사건. 가해자들이 다수 청소년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면서 성착취
범죄를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철저 수사 및 가해자 신상 공개, 국제수사 공조
등을 요구한 청원. 총 744만명 이상 국민이 동의함(역대 최대)



심신미약 감경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일명 김성수법)

- ✓ 「형법」개정, 법관 판단으로 감경 여부 결정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등
심신미약 감경 폐지 관련 20만 동의 이상 청원 4건

*2018년 10월,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의 희생자 지인이 올린 청원, 119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함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및 처우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 ✓ 국립소방병원 건립(24년 개원), 위험직무 순직 인정
- ✓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6개 법안 개정(19.11)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2019년 4월)

*2017년 국가재난 대응과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해, 42년 만에 소방청으로 분리되면서 소방공무원의 중요성이 커진 때, 지방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력충원이나 장비 차이가 나는 지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옴. 사흘만에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 개정
(18.12/ 일명 윤창호법)
- ✓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처벌 강화
(1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단속기준 강화(0.05%→0.03%), 2회 적발시 면허취소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인생이 박살났습니다* 등 20만 이상 청원 5건

*2018년 10월.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친구들이 올린 청원, 40만 6천명 국민이 동의함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법·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 개정('19.12)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가중처벌
- ✓ 「도로교통법」 개정('21.10)
: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및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 ✓ 「어린이안전관리법」 제정('20.5)
: 어린이 응급환자 신고·이송조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등 어린이 교통안전 요구 관련 20만 이상 청원 4건

*2019년 11월, 교통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및 주차장
사고예방, 어린이통학버스 규정 강화 등 생명안전 5개 법안 제정을 호소한 청원,
41만명의 국민이 동의함



아파트 경비원, 항만근로자 등 노동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3/'21.7)
: 폭언 등 보호대상을 경비원 등으로 확대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명확화, 갑질신고센터 운영
- ✓ 항만근로자 재해예방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 수립('21.7.5.)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2020년 5월, 44만명 국민 동의)*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입주민이 사건을 고발한 청원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주세요 (2021년 6월, 23만명)

평택항에서 산재로 사망한 23살 고 ***군의 친구입니다
(2021년 5월, 총 9만명 동의) 등 2건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습니다

- ✓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발표('20.1)
: 반려동물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 동물 학대자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등
- ✓ 「동물보호법」 개정
: 동물학대 범위 확대('18.8), 벌칙 상향(1년 → 3년)
-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동사동물 실험요건 제한
(‘20.2『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채팅방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 등 20만 이상 동물학대 고발 청원 14건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이고 이를 전시하고 자랑한 오픈채팅방 수사요청 청원으로
27만명이 동의함



한부모가정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강화
(‘21.7『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개정)
: 정당한 사유 없을 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금지 등
제재 강화
-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1.4)
: 생계급여 받아도 아동양육비 지급(10만원), 자립기반 부족
청년한부모(만25세~34세)에 추가아동양육비(5~10만원)
지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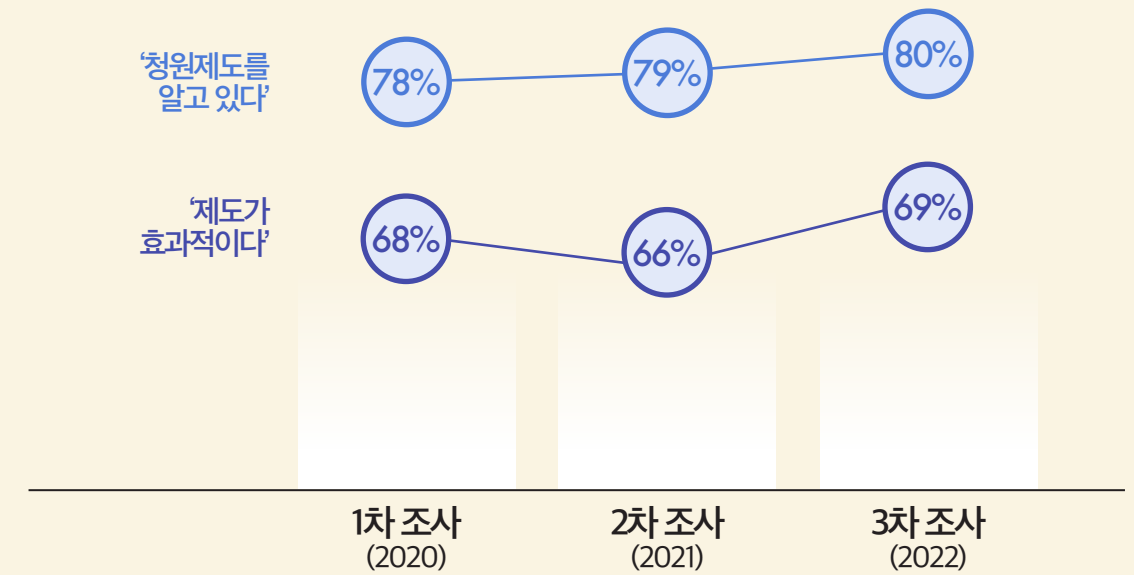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2018년 2월, 국민동의 21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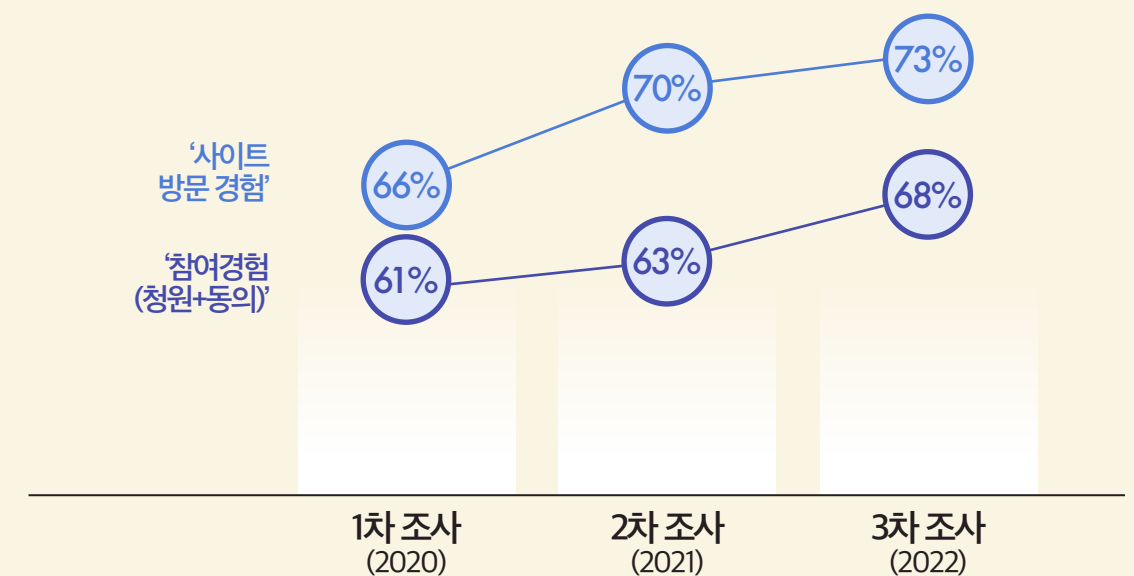
국민들이 바라본 ‘국민청원’



국민 모두의 국민청원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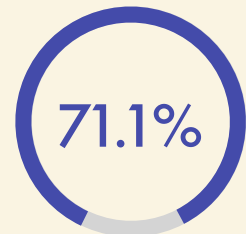


국민 누구나 활용하는 직접소통 수단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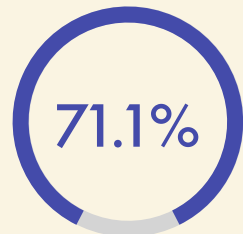


문제해결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청원에 대한 조치들이 문제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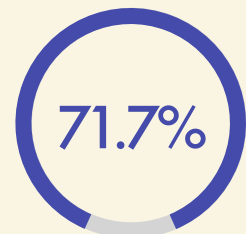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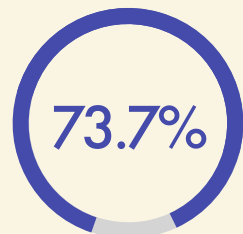
디지털성범죄 및 아동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N번방 방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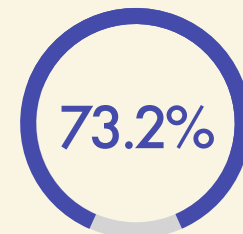
사법적 처벌 시
심신미약 강경의무 삭제
(김성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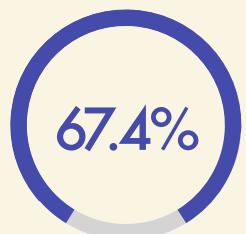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및 처우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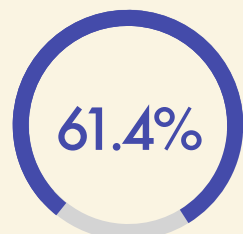
음주운전 처벌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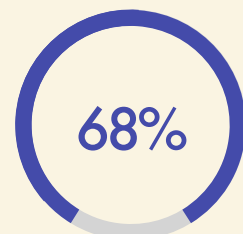
어린이 교통안전법
제도 개선



아파트 경비원, 항만근로자 등
노동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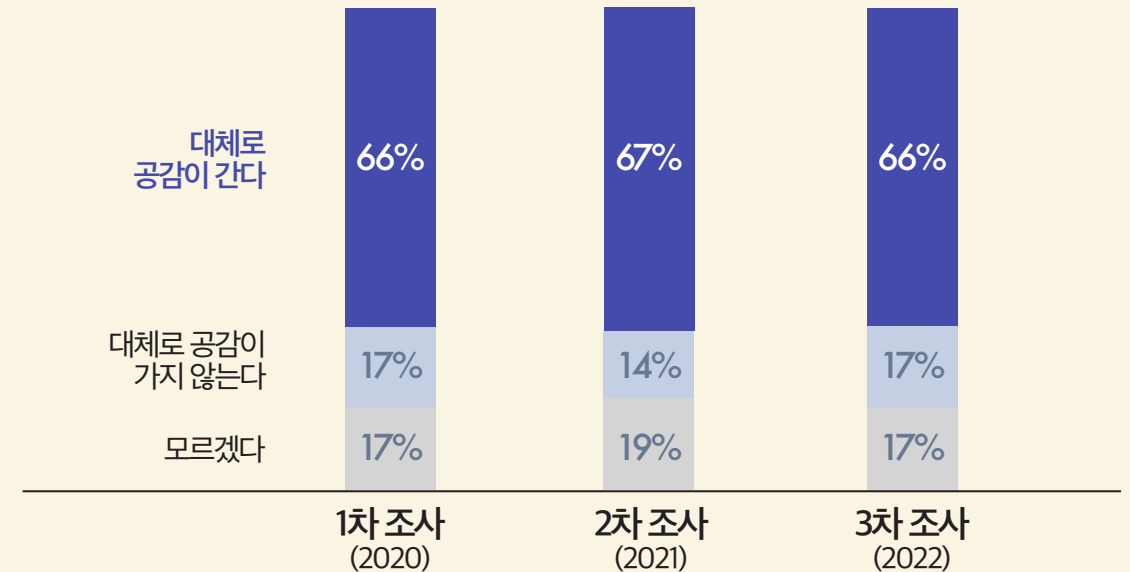


동물보호법 강화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청원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집단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남녀

표집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1차:1,200명 / 2차:1,297명 / 3차:1,292명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83%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립가중)

조사일시 1차 : 2020년 6월 1일-3일 / 2차 : 2021년 8월 6일-9일 / 3차 : 2022년 4월

1일-4일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세상을 바꾼 5년, 국민청원



2017년

- 8월 19일 • 국민청원 플랫폼 개설
- 9월 6일 •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 첫 20만 동의 달성
- 9월 25일 • [국민청원 답변 1호]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

2018년

- 1월 • [운영성과] 국민청원 누적 청원 수 10만 건 달성
- 1월 16일 • [국민청원 답변 5호] 권역외상센터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요구 청원
- 3월 2일 • [국민청원 답변 10호] 미성년자 성폭행 형벌 강화 요구 청원
- 4월 24일 • [국민청원 답변 22호]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 제정요구 청원
- 10월 21일 • [국민청원 답변 52호]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친구의 청원 - 음주운전 처벌 강화
- 12월 11일 • [국민청원 답변 57호] 첫 100만 명 동의
-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 심신미약 감경 반대
- 12월 • [운영성과] 국민청원 누적 방문자 1억 명 달성

2019년

- 1월 8일-18일 • 국민청원 개편 관련 설문조사 - 문제점 보완, 개선책 마련 목적
- 1월 • [운영성과] 국민청원 누적 청원 수 50만 건 달성
- 4월 1일 • 국민청원 개편 - 사전동의제 도입, 게시물 일부 숨김 및 비공개 요건 공개 등
- 4월 24일 • [국민청원 답변 91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청 청원
- 11월 • [운영성과] 국민청원 누적 방문자 2억 명 달성
- 12월 19일 • [국민청원 답변 128호]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처벌 요구 청원
- 12월 • [운영성과] 국민청원 누적 동의 수 1억 건 달성

2020년

- 1월 10일 • 국민청원 답변 131호] 어린이 생명안전법 통과 촉구 청원
- 3월 24일 • [국민청원 답변 143호-147호] 통산 청원 동의 수 1위
- 텔레그램 n번방 관련자 신상공개 및 강력처벌 등 요구 청원

- 5월 • [운영성과] 국민청원 누적 방문자 3억 명 달성
- 5월 19일 • [국민청원 답변 160호-163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고발 및 처벌 요구 청원
- 6월 2일 • [국민청원 답변 172호]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 낸 청소년 엄중처벌 요구 청원
- 8월 19일 • 국민청원 3년 대통령 메시지 - '국민이 물으면,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
- 8월 12일 • [국민청원 답변 177호/178호] 데이트폭력 엄중처벌 청원 및 딸 성폭력 불기소 처분 비판 청원
- 9월 2일 • [국민청원 답변 180호]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 처벌 요구 청원
- 10월 27일 • [국민청원 답변 197호/198호]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 요구 청원
- 12월 22일 • 청원법 60년 만에 전면 개정 - △온라인 청원 시행, △공개 청원제도 도입 등

2021년

- 1월 • [운영성과] 국민청원 누적 방문자 4억 명 달성
- 1월 10일 • [국민청원 답변 211호-215호] 아동학대(정인이) 사망 사건 관련 청원
- 2월 24일 • [국민청원 답변 226호] 고양이 학대 오픈 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청원
- 5월 • [운영성과] 국민청원 누적 청원 수 100만 건 달성 / 국민청원 누적 동의 수 2억 건 달성
- 7월 9일 • [국민청원 답변 245호/246호] 평택항 컨테이너 사건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 관련 청원
- 7월 22일 • [국민청원 답변 250호]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청원
- 8월 17일 • [국민청원 답변 255호]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보장 의무화 요구 청원
- 8월 19일 • 국민청원 4년 대통령 영상답변 게시 - '오늘은 제가 청원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 9월 6일 • [국민청원 답변 259호/260호] 학교폭력 피해학생 사망 관련 청원
- 10월 8일 • [국민청원 답변 264호]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고발 청원
- 12월 • [운영성과] 국민청원 누적 방문자 5억 명 달성
- 12월 21일 • 청원법 시행령 제정

2022년

- 2월 25일 • [국민청원 답변 279호] 간호법 제정 요구 청원
- 3월 23일 • [국민청원 답변 282호-284호] 동물보호 강화 요구 청원
- 5월 9일 • 국민청원 종료

국민청원 동의수 TOP25

이렇게 운영되었습니다

1위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2,715,626명	20.3월
2위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2,026,252명	20.3월
3위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1,831,900명	19.4월
4위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1,504,597명	20.2월
5위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1,469,023명	20.2월
6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강제 해체를 청원합니다.	1,449,521명	20.2월
7위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1,192,049명	18.10월
8위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	1,007,040명	20.4월
9위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761.833명	20.1월
10위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757,730명	19.8월
11위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738,566명	19.3월
12위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735,972명	20.7월
13위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714,875명	18.6월
14위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주세요	670,780명	21.3월
15위	가해자 n번방박사, n번방회원 모두 처벌해주세요	650,579명	20.3월
16위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	639,617명	20.9월
17위	조두순 출소반대	615,354명	17.9월
18위	김00, 박00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614,127명	18.2월
19위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	596,410명	20.7월
20위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	571,995명	20.8월
21위	윤석열 당선자의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봐주기 의혹과 김건희의 주가조작 실체의 진상조사 확인을 위한 청원입니다.	548,720명	22.3월
22위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만들고자, 국가안전 중추인 국방부를 강압 이전하여, 국민의 혈세 수천억을 날리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544,898명	22.3월
23위	저희 25개월딸이 초등학교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533,883명	20.3월
24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	530,569명	21.8월
25위	강00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529,144명	20.7월

(22.4. 기준)

게시

사전동의*

국민청원 100인 사전동의제

청원을 게시하면 사전동의 링크를 제공, 100인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민청원 게시판 공개 / 중복청원, 비방, 욕설 등 부적절한 청원 노출 줄이고, 국민 목소리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절차 /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2019년 3월 도입. 국민청원 개편설문조사에서 63.2%가 사전동의제 도입 찬성(총 77,321명 참여)

공개

답변요건충족

🕒 30일 동안 + 👍 20만명 동의

정부 답변
(한 달 이내)



2022년, 모든 정부기관에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정부를 비롯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온라인으로 청원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2022년 말 도입됩니다.

청원권은 헌법 제26조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 중 하나로, 1961년 ‘청원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60년간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가 2020년 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됐고, 정부는 그동안 ‘문서 제출’로만 가능했던 청원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청원제도 강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각 기관은 청원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공개청원 제도 등 청원 관련 절차를 정한 뒤 올해 말까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에 따른 것이 아닌 문재인 정부 소통 수단으로 시작한 것이었는데, 이곳에 보여준 국민의 폭발적인 참여가 사문화됐던 청원권 부활로 이어진 것입니다.

세상을 바꾼 5년

2017.8.19

2022.5.9

국민이 바꾼 5년



Since 2017.8.19.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어 의미가 컸던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거라 믿습니다.

국민청원과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